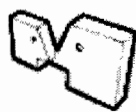


보도/해명자료

중소기업청의 보도/해명자료를 알려드립니다.



제 목	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		
담당부서	소상공인정책과	담당자	백철안
E-mail		전화번호	042-481-8922
조회수	112	등록일	2009-04-13
첨부자료	첨부 자료가 없습니다.		



소상공인 영업규제 확 푼다

- 규제완화로 177만 업소 수혜, 3047억원 비용부담 경감 -

□ 소규모 떡집(16.5m²~33m²)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,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~2년간으로 축소된다. 도·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·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.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은 4월 9일(목)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「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」을 보고했다.

+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, 소관부처(13개)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.

<주요 영업규제 개선내용>

- 33m²미만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 완화
- 참기름, 두부 등 즉석식품류 '자가 품질검사' 항목을 개선
-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, 칠순연의 경우 허용
-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의무를 1년 이내에서 유예
-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 현실화
-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
-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
- 공중위생업의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폐지

+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, 목욕탕, 떡집,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으며, 이로 인해 약 3,047억원(추정)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 완화(5천 400개 업소, 740억원)

- 즉석식품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위해항목 위주로 개편함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(7만 2천개 업소, 52억원)

*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요소는 강화하되, 수분·지방 함량 등 간접항목은 제외(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입법예고중)

-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수수료 현실화(58만 4천개 업소, 200억원)

-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(257개 업소, 45억원)

-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개선(8,852개 업소, 265억원)

- 영유아 보육시설 실외 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(11,447개, 1.370억원)

□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,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

+ 그간 소규모 음식점, 목욕탕, 소매점포 등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.

+ 그러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부터 「작지만 중요한 규제」를 음식업중앙회,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했다.

□ 중소기업청은 오늘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들과 적극 협조하여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.

+ 또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·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「소상공인 규제개선팀」을 구성하여 가동하고, 「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」를 설치·운영하며,

+ 영세자영업자, 상인, 주부 등과 「소통마당」을 통해 현장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.

+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「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」를 활용하여 규제 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.

☞ **붙임 :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**

덧글쓰기

목록

이메일보내기